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48호  
2022. 3. 21

## 정책동향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필요

## 시장동향

■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용도에 맞는 제도적 지원 필요

## 산업정보

■ 글로벌 CEO 77%,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 전망

■ 향후 4년, 세계 모듈러 건설시장 연간 4.7~7.0% 성장

## 건설논단

■ 건설안전과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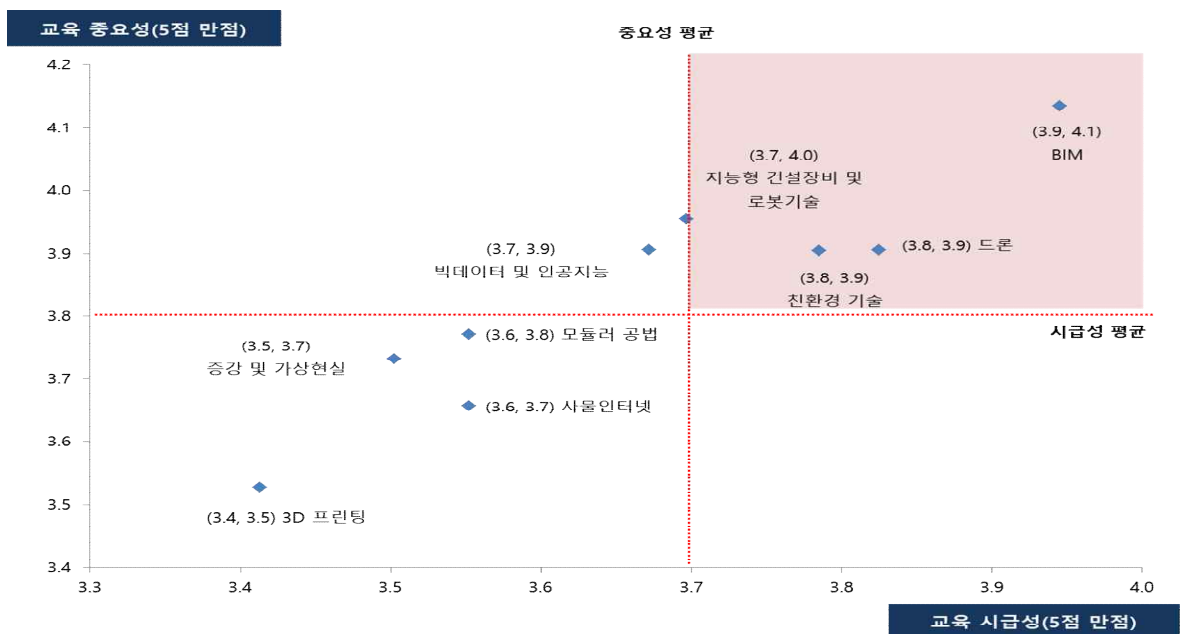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필요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정부 정책 지원도 '미흡' -

### ■ 건설현장 '안전관리 능력' 중요성 증대, 그러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은 낮아

- 지난 1월 27일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건설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대형 건설업체를 제외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마련이 필요함.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에 따르면, 'BIM', '드론', '친환경 기술',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 기술'과 관련된 교육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스마트 건설기술별 교육의 시급성 및 중요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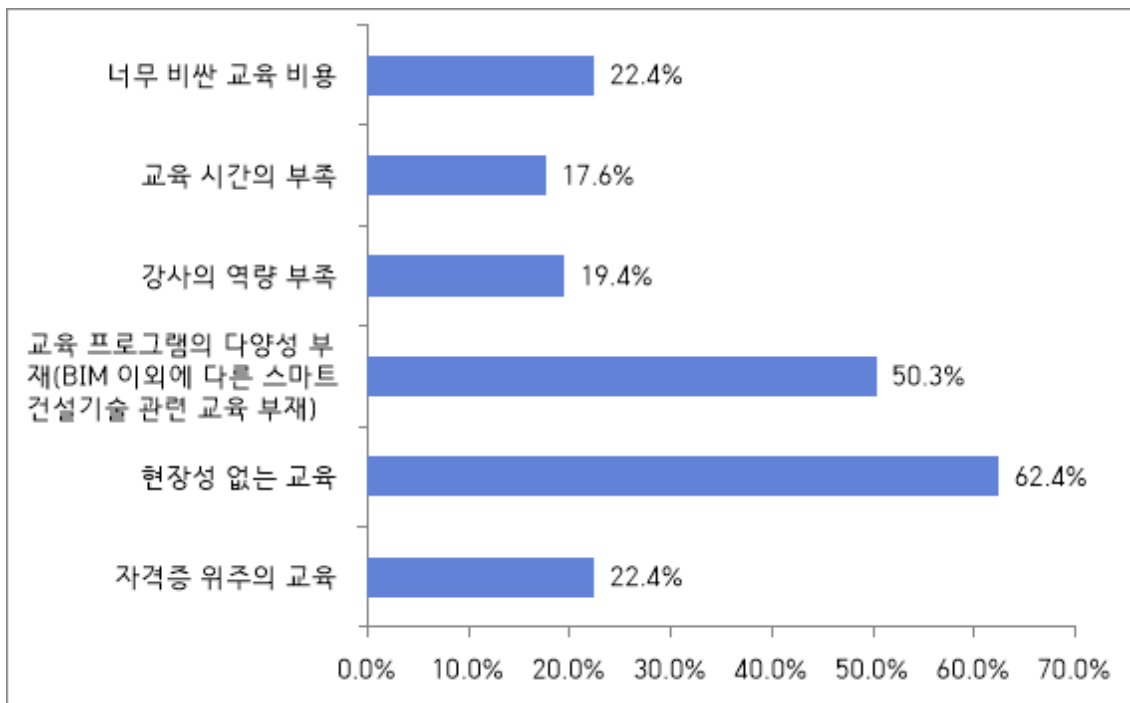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1), 「스마트건설 교육훈련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 ■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

- 현재 직업전문교육기관에서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도움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5.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6.9%를 차지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2.4%가 '현장성 없는 교육'을 1순위로 꼽았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재'가 50.3%로 2순위를 기록함.

<그림 2>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이 도움 안 되는 이유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1), 「스마트건설 교육훈련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 ■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필요해

- 따라서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 체계적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향후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체 응답자의 52.3%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1순위로, 44.1%가 '스마트 건설기술별 교육 커리큘럼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을 2순위로 선정함.

<표 1> 향후 직업전문교육기관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 보완되어야 사항

항목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BIM 이외 다른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교육 과정 개설 필요)	52.3%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NCS 지표를 반영한 커리큘럼 개설	21.0%
스마트 건설기술별 중급 및 고급 과정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2~3일)의 개설	31.8%
스마트 건설기술별 교육 커리큘럼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단계별 교육) 필요	44.1%
스마트 건설기술별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시공 등 업종별 구분 필요	40.0%
스마트 건설기술별 교육 커리큘럼을 주체별(발주자, 시공사 등)로 구분 필요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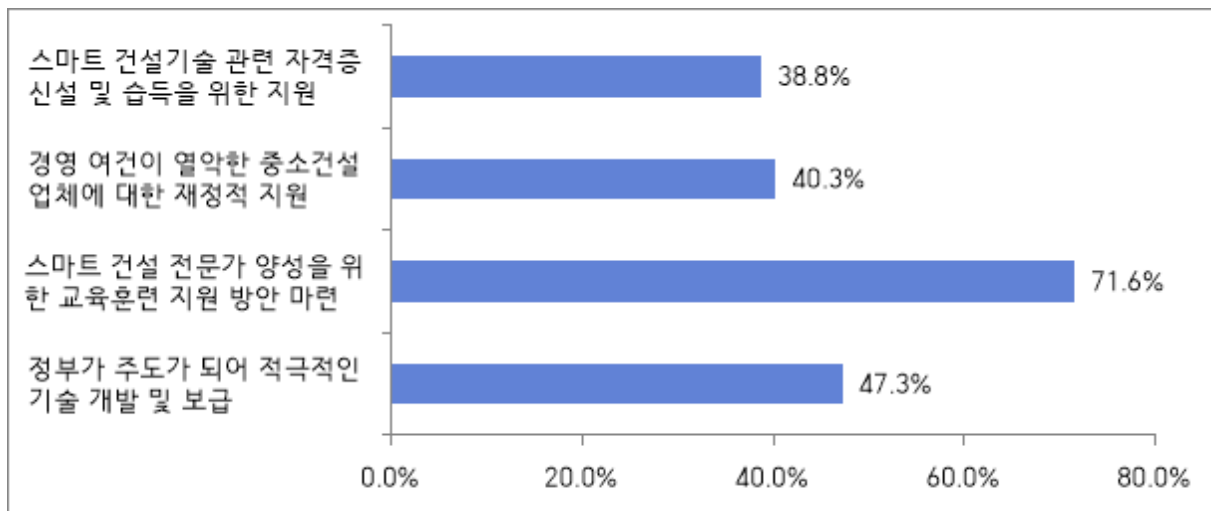
주 : 중복응답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1), 「스마트건설 교육훈련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 ■ 정부 또한,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 한편,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함. 구체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측면에 중점을 둔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응답자 71.6%가 ‘스마트 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방안 마련’을 1순위로, 47.3%가 ‘정부가 주도가 되어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보급’을 2순위로 꼽음.

<그림 3> 향후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1.11), 「스마트건설 교육훈련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 스마트화된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요구 역량 변화 대응은 현재 건설현장 내 부각되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또한, ‘노가다’, ‘최후의 일자리 보루’라는 건설현장의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용도에 맞는 제도적 지원 필요

- 2022년 총물량 100만호 예상, 오피스텔 장점 극대화할 유연한 정책 마련할 시점 -

### ■ 오피스텔, 주거이동의 사다리 역할 수행하며, 주거 만족도 높아<sup>1)</sup>

- (총물량) 2022년을 기점으로 전국 총 오피스텔 물량 100만호 시대가 시작됨. 이제는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에 맞게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진단해야 함.
  -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총 오피스텔 물량은 94.2만호임. 최근 오피스텔 분양과 준공 추이를 고려하면 2022년 연내 100만호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임.
  - 오피스텔 총재고는 연립주택의 2배에 달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일정 위치는 차지하는 시장으로 성장함.
- (공급) 오피스텔의 다수가 수도권에 공급되었고 주거용으로 활용됨. 대부분 상업지에 입지하고 지하철역과 3km 이내로 양호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입지함. 최근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증가하여 연간 공급 물량이 아파트 대비 20%에 이르며 시장 영향력이 커짐.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2021년 상반기)과 그 외 공개된 행정정보를 수집하여 오피스텔의 공급 특성을 파악함.
  - 전체 물량 중 70.1%가 수도권에 공급되었고, 80% 이상이 상업지역(67.3%)과 준주거지역(14.9%)에 입지함. 도시철도 직선거리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직주근접성이 높고 양호한 인프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201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 연간 공급량은 10%를 밑돌았으나, 2013년 이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지속 증가하여 최근에는 20%를 넘어서면 시장 영향력이 확대됨.
- (수요)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40대 이하 비중도 77.4%에 달함. 80.4%가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며, 보증부 월세, 2년 이내 단기 거주 형태가 다수임. 즉, 젊은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오피스텔 거주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중 73.4%, 40대 이하 비중이 77.4%임. 1인 가구와 젊은 계층의 오피스텔 선호를 반영함.
  -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80.4%이며, 과반이 보증부 월세의 형태이며 2년 이내 단기 거주 비중도 80%를 넘어섬.

1) 본 고는 “허윤경(2022),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성과와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 젊은 계층의 생애주기상 자산 규모가 작고, 주거이동이 잦은 특성에 맞추어 상품이 발전해 옴.
- (임대사업자) 자본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낮고 실질 임대수익률은 4%를 하회함. 낮은 회전율 및 보유기간을 고려하면 아파트 대비 투자 매력도가 낮음.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 비율은 40% 남짓으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함. 이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고자산가가 아니며 투자성향도 강하지 않음을 의미함.
- 지금까지의 오피스텔 공급은 안정적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발적 공급에 기대어 이루어져 옴.

### ■ 민간공급 활성화 지속하고 공공지원 모델도 개발해야

- (성과) 100만호에 달하는 물량은 1~2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며 이들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됨. 특히, 주거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 만족도가 아파트보다 소폭 높음. 이는 다양한 주거유형에서 오피스텔로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거주자의 서비스 개선 체감이 다른 상품에 비해 큼.
  - 오피스텔이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시장의 완충재 및 주거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 비중도 높는데 이는 젊은 1인 가구 거주 비중이 높은 점과 연계되어 있음.
- (과제) 오피스텔의 본질은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업지에 공급되는 유연한 용도의 소형 부동산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위상을 설정해야 함.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최근 이용 상황 변화와 미래 공간 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이후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혼합 용도의 법령상 위상을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규제 질서를 정의해야 할 것임.
  - 이제는 틈새 상품으로 치부하는 과거식 인식에서 벗어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 함.
  -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오히려 대형 오피스텔을 아파트형 상품으로 유도하면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종합적 반성이 필요하며, 신중한 접근도 필요함.
  - 오피스텔이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어 공공은 도심지에 지불가능한 오피스텔 재고를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임차자를 지원해야 함.
  - 공유주택 모델을 활용하여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복합적 문제(고용, 의료, 주거 등)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주거개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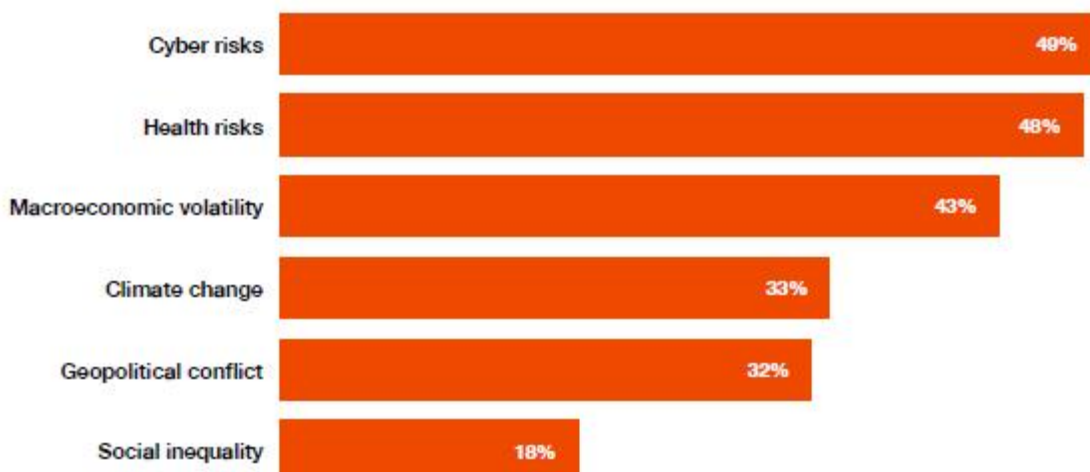
## 글로벌 CEO 77%,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 전망

- 2012년 이후 최고 수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세의 지속성을 높게 인식 -

### ■ PwC가 시행한 25번째 글로벌 CEO 조사에서 2022년에도 세계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평가 우세<sup>2)</sup>

-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7% 높고, 2012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 설문조사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출현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추세의 지속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임.
  - 전체 응답자의 49%는 사이버 리스크(cyber risks)가 향후 12개월 동안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함. 하지만, 사이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제조와 소비재 분야의 CEO는 각각 40%와 39%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이어 의료 리스크(health risks)가 두 번째로 높은 48%의 응답률을 기록함. 실업 및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하는 거시경제 변동성(macroeconomic volatility)이 세 번째로 높게 평가됐으며,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지정학 충돌(geopolitical conflict), 사회 불평등(social inequality)이 각각 33%, 32%, 18%의 응답률을 보임.

<그림 1> 향후 12개월 동안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위협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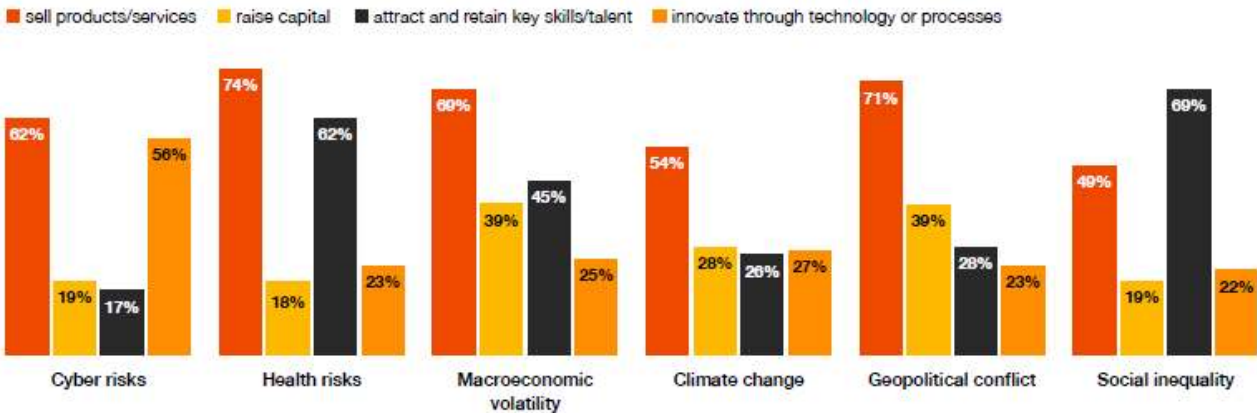


2) PwC(2022), 「PwC's 25<sup>th</sup> Annual Global CEO Surve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설문조사 시기 2021. 11).

■ 개별 리스크 요인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sell products/services)’ 영역이 가장 높아

-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투자 유치(raise capital), 핵심기술 및 역량 보유(attract and retain key skills/talent), 기술 또는 프로세스 혁신(innovate through technology or processes)과 같은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리스크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로벌 CEO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
  - 6개의 리스크 요인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비즈니스 활동은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였으며 특히, 의료 위협과 지정학 충돌은 각각 74%와 71%로 조사됨.
  - 리스크 요인 조사에서 18%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던 사회 불평등 요인은 핵심기술 및 역량 보유 영역에 가장 큰 영향(69%)을 줄 것으로 평가됨. 헬스 리스크도 핵심기술 및 역량 보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응답률이 62%를 기록함.

<그림 2> 위협요인별 비즈니스 활동에 미치는 영향



- 리스크 요인에 따른 영향이 가장 낮게 평가된 영역은 투자 유치로 헬스 리스크는 18%를, 거시경제 변동성과 지정학 충돌이 39%를 기록함.

■ 1~2년 안에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필수

- PwC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 조직 내 소통 강화, 필요 역량 확보, 외부자원을 활용한 리더십 구축, 인센티브 체계의 효율화, 외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상술한 요인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단발성 사건도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대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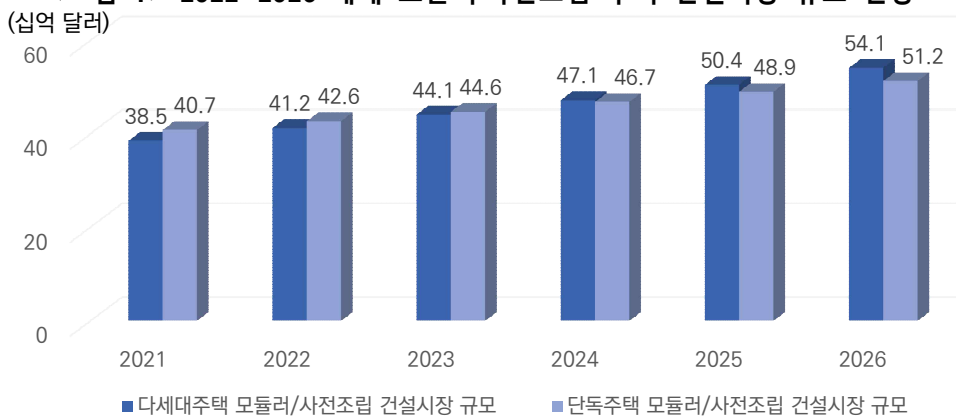
# 향후 4년, 세계 모듈러 건설시장 연간 4.7~7.0% 성장

- 2026년까지 단독주택 4.7%, 다세대주택 7.0% 성장 전망 -

## ■ 세계 모듈러·사전조립 주택 건설시장 연간 4.7~7.0% 성장 예상

-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의 운영도 재정비되어 모듈러·사전조립 주택 건설시장이 원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국의 시장조사기업 Reportlinker는 보고서를 통해 2026년까지 모듈러·사전조립 단독주택 건설시장이 연평균 4.7%, 다세대주택 시장은 연평균 7.0% 성장할 것으로 분석함.<sup>3)</sup>
  - 2021년 기준 모듈러·사전조립 단독주택 시장 규모는 407억 달러, 다세대주택 시장 규모는 385억 달러로 다세대주택 규모가 소폭 작지만, 높은 성장률로 2024년부터는 다세대주택 시장 규모가 단독주택 시장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 시장 규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동유럽,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프리카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 시장을 선도할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는 Guerdon Modular Buildings(미국), ATCO(캐나다), Laing O'Rourke(영국), Red Sea International Company(사우디), Vinci Construction Grands Projets(프랑스), Bouygues Construction(프랑스), Skanska AB(스웨덴), Kleusberg GmbH & Co.(독일), Algeco(벨기에), Kattera(미국) 등이 선정됨.

<그림 1> 2022~2026 세계 모듈러·사전조립 주택 건설시장 규모 전망



3) 본고는 2021년 12월 30일 Reportlinker에서 발간한 「Single-Family/Multifamily Modular and Prefabricated Housing Construction Global Market Report」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 ■ 사업비 절감 효과와 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에 성장 지속

- 모듈러 주택의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 자재 사용량 감소, 공장 생산을 통한 품질관리, 현장 혼잡도 저감 및 안전성 향상 등이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조사결과 미국·유럽의 신규 건축물 중 모듈러 시장의 가치는 2030년까지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시공 방식과 비교해 연간 2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모듈러·사전조립 공법 적용 의무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건설 폐기물 감소를 위한 각국 정부 정책이 모듈러 주택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설 폐기물 저감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모듈러·사전조립 주택의 수요 증가와 시장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건설청(BCA)의 경우 조립식 건축기술인 PPVC 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민간주택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PPCV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택개발청(HDB)은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35% 이상에 PPVC를 적용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 사전제작 모듈의 운송과 관련한 리스크가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모듈러·사전제작 방식은 현장에서 떨어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으로 운반되어 조립·설치해야 하므로 운송 경로 및 이동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전제작 부품의 운송과 관련한 각국의 규제(운송용 차량의 최대 중량 등)가 조달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모듈러 주택시장의 BIM 적용 확대는 기획·설계단계의 협업 및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전제작 요소의 보관 및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 BIM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기획 및 설계 단계의 기계, 전기 및 배관 시스템과 사전제작 요소의 호환성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Autodesk Revit과 AGACAD는 최근 각각 BIM 기반으로 사전조립 구성요소의 분류, 포장, 적재를 계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 Panel Packer를 출시했음.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 건설안전과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대 및 경제 상황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현세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소망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 국가와 정부가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납세, 병역 등 국민이 져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

정부의 책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의 크기만큼 높아진다. 국가에 대한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정부가 국민과 공감하지 않으며 권한만을 주장하며 책임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다. 또한, 국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6월 여당의 김교홍 의원 등 36명은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와 시공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어 건설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일견(一見), 광주의 철거건물 붕괴 및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등 최근 늘어나는 건설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동법은 31조 및 39조에서 기술되었듯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리고 건축사를 비롯한 발주설계시공감리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감소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시공능력순위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안전사고 감소를 유인할 수 있는 혜택은 전무하다. 심지어,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정부 등 행정기관의 책임분담에 관한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시 정부와 행정기관을 제외한 공사와 관계된 모든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징벌적 법안으로만 해석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자. 건설공사에 있어 정부와 행정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이들의 법적, 암묵적 동의 없이 대부분 건설현장은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공사의 최종 인허가권이 정부 등 행정기관에 있음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현장에서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역할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파트 건설현장을 예로 들어보자. 많은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신원확인이 어려운 비숙련 불법체류자가 다수 일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 채용과 관련한 노조 간의 다툼으로 건설현장의 출입구가 폐쇄되는 일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사가 재개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정부 등 행정기관이 불법체류자를 제대로 단속하고 노조 간의 불법 쟁의를 조속히 정리한다면 이들로 인해 실질 공사 기간이 단축되며 건설 목적물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말이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임기 내에 서민의 주택공급 요구를 해소하려는 당선인의 주택정책에 「건설안전특별법」이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공포 정책이 아닌 정부와 건설관련자가 함께 발맞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사고 감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사고에 대한 책임을 건설공사 관계자와 함께 나누어지려는 정부의 자세 전환 또한 절실히 보인다.